

---

#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

---

2026. 8. 28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I. 추진 배경

## □ 코로나 시기 금융 중심 지원을 통해 가계·소상공인 등 부채 누적

-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175조원+a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('20~'22년)\* 등으로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제공

\*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, 중소기업기업 자금지원 확대,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등('20.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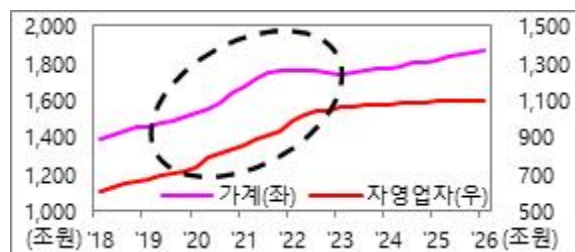
- 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, 중소기업 및 가계·자영업자 부채 빠르게 증가

중소기업 부채 추이



\* 출처: ECOS, 기업경영분석

자영업자 및 가계 대출 추이



\* 출처: ECOS, 한은 가계부채DB

## □ 팬데믹 이후 내수회복 지연되며 부채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

- 경기적·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만기연장·상환유예, 채무조정 등 부채부담 완화 + 금융비용 경감 지원

\* ('24.7)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, ('24.12)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, ('25.9)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,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완화 개선방안

- 또한,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(금융위)를 6차례 개최\*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포용금융 확산 추진

\* 주요 안건: 1차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, 2차금융회사 채무조정 활성화 및 채권 관리 강화, 3차미소금융 공급 확대, 4차중금리대출 활성화, 5차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, 6차은행대리업 시범운영방안

- 그간 지원에도 코로나 기간('20~'23년)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40% 이상 아직 상환\*중

\* 코로나 기간('20~'23년) 은행권·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.7조원 중 미상환 잔액 154.7조원(43.1%),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.1% 수준(중기부 추계)

- 새도약·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

\* 새도약기금은 '18.6월 이전 연체 발생 채권만 매입,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에 한정

## □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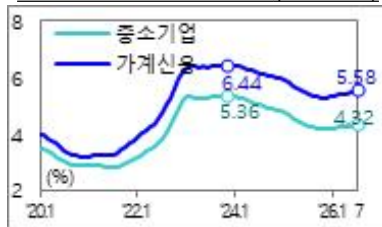
- 대출금리는 아직 고금리기('23.'24년)에 비해 낮지만, 지표(COFIX)·조달금리(은행채)가 크게 상승하며 향후 금리부담 증대\* 전망

\* 금리 변경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표·조달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

※ 중소기업들은 '22년 이후로 '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'를 가장 절실한 금융 지원 과제라고 답변(2위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)

- P-CBO 발행금리도 상승하며 채권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확대

예금취급기관 대출금리(잔액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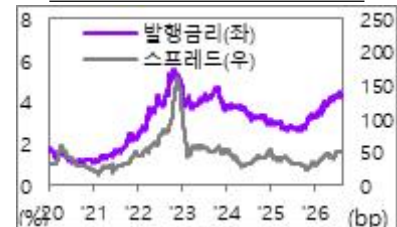
\* 출처: ECOS

지표·조달금리 동향



\* 출처: 연합인포맥스

P-CBO 발행금리·스프레드



\* 출처: 연합인포맥스

## □ 연체율 높아진 가운데, 금리 상승시 부실 장기화·확대 가능성

- 중소기업 등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·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을 상회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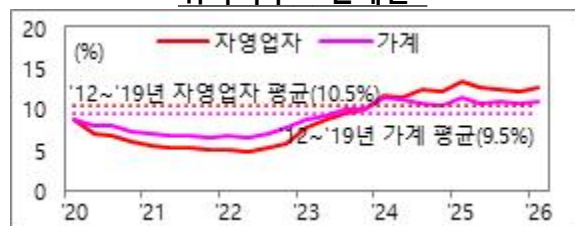
\* 은행권 대출 연체율(% , '21년 평균→'26.6월): [중소기업] 0.4→0.8 [개인사업자] 0.2→0.7  
취약차주 전금융권 연체율(% , '21년 평균→'26.1Q): [자영업자] 5.3→12.7 [가계] 6.8→10.9

은행 기업대출 연체율



\* 출처: 금융감독원

취약차주<sup>1)</sup> 연체율



\* 출처: 한은 가계부채 DB /

1)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

- 금리 상승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환부담 가중\* 우려

\* (가계 취약차주) 저소득 & 신용대출(변동금리 비중↑) 비중 대 (중소기업)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 높

◇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해 ①채무조정 활성화, ②중기·소상공인 지원 확대, ③서민금융 지원 강화 추진

## II. 지원방향

### 〈 기본 방향 〉

- ◇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채무부담 가중 우려 →  
누적된 부채를 정리하는 한편, 대상별 저리 금융지원 강화

### 〈 세부 추진방안 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채무조정<br/>활성화 등<br/>재기지원</p> | <p>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강화 등 소상공인·개인의 사회복귀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 연체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,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 강화</li> </ul> <p>② 회생절차 지원, 금융제공 등 통한 신속한 정상화 뒷받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‘기촉법’ 연장, 캠프 DIP금융 이자보전 협약 확대 추진, 취약채무자 개인 회생·파산 지원 확대,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제공 정책자금 연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중·소상공인<br/>지원 확대</p>        | <p>① 성실상환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·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보·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확대(<math>\Delta 0.3 \rightarrow \Delta 0.4\%</math>), 수은·구조조정 기업 중 성실 상환중인 기업에 대한 이자감면 제도 신설</li> </ul> <p>② 정부 신용 등을 활용해 조달한 저리자금 공급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은·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(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), 수은·산은 온렌딩 공급 확대</li> </ul> <p>③ 이차보전, 고금리 대출 대환, 보증 등을 통한 금리부담 경감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진공·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 추진, 소진공·대환대출 대상 확대 +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, 기보·경영애로 기업 추가보증시 보증료 감면 신설</li> </ul> |
| <p>서민금융<br/>지원 강화</p>          | <p>① 중·저신용자를 위한 공공·민간의 서민금융 상품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햇살론(일반보증·특례보증) 연간 공급 확대(’26년 5.9 → ’27년 6.2조원), 소액·저리·장기대출 출시,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확대</li> </ul> <p>② 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 금리 변동성 대응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은행권 순수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(’26.下)</li> </ul> <p>③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통한 서민·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상공인의 성장성·잠재력 등 평가해 신용등급·점수 반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Ⅲ.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

#### 1 채무조정 활성화 등 재기 지원

##### 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강화 등 소상공인·개인의 사회복귀 지원

- 유동화회사·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('26.6월)\*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·조정('26.下)
  - \*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(조원): (유동화회사) 1.1 (대부업체) 최대 4.5
-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('27년)
  - 장기 연체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\* 지원 강화
    - \* 채무조정 → 신용회복 → 재기 및 사업능력 회복 등
-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, 상환능력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 강화('26.下)
  - 수은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('26년 162억원) +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 소멸 조치

##### ② 회생절차 지원, 금융제공 등 통한 신속한 정상화 뒷받침

- (워크아웃) 올해 말(12.26일) 일몰 예정인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 연장\*을 통해 부실장후기업의 원활한 재기 지원
  - \*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제도 등의 근거법('01년 최초 제정 이후 '23년 7차 기촉법 시행)
- (기업회생)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지원 협약 적극 확대(現 충남도청 협약 통해 충남도 기업 이자 2%p 보전)해 캠프 DIP금융\* 금리 절감 추진
  - \* (대상) 신용등급 C-D or 회생·워크아웃 진행 기업 (한도) 운영시설 20억원, 대한담보가액內 (금리) 4.9~5.4%('26.6월말 기준)

- (개인회생)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무료로 신속히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·변호사 등 지원 확대

\* 신용회복위원회 파산·회생절차 관련 지원인력 추가고용, 신용회복위원회·법률구조공단 간 연계지원 강화 등

- (소상공인)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해 소상공인 차주 특성을 반영한 재무, 금융·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, 소진공 정책자금 연계·우대 지원

## 2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확대

### 1 성실상환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·확대

-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금리·한도 인센티브 지속 지원
  - (소진공)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  $\Delta 0.3\%p$ , 한도 2억원 상향 등 지원('25.7월~)
  - (기은)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\* 공급 확대(1.5→3.0조원, '26년)
    - \* (대상) 성실상환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(우대) 금리  $\Delta 1.8\%p$  한도 운전·시설 5억원
-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·이자 감면 신설·확대
  - (신보)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\* 보증료율 우대 확대( $\Delta 0.3 \rightarrow \Delta 0.4\%p$ , '26.9월)
    - \* (대상) 일정 규모, 성장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
(지원조건) 보증료율  $\Delta 0.3 \rightarrow \Delta 0.4\%p$  우대, 보증한도 3억원, 보증비율 90%
  - (수은)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이자감면\* 제도 신설('26.9월)
    - \* 연체 미발생 기업 대상, 수은 자금원가(약 3% 수준) 이하 금리(예: 年 1%) 적용
-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('27년) 시 성실상환정보 등 활용 추진

## ② 정부 신용 등을 활용해 조달한 저리자금 공급 확대

- (한은) 지방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(‘27년, 금통위 의결要)

\*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동결(8.27일)

▶ (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신설)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·금리 탄력 조정·지원(‘27.下)하고 취약부문 등에 높은 가중치 부여해 금융접근성 제고 도모

▶ (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 증액)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(14조원) 단계적 종료로 확보되는 한도 등을 활용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(※5.9조원) 확대(‘27.上)

- (수은)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0.2조원 증액(‘26년 목표 4.1→4.3조원)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추진

- (산은)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산은이 조달한 저리 자금\*을 지원하는 온렌딩 공급 확대(‘26.下, +0.4조원(9.2→9.6))

\* (대상) 중소기업 (한도) 시설자금 건별 최대150억원, 운영자금 건별 최대60억원

## ③ 이차보전, 고금리 대출 대환, 보증 등을 통한 금리부담 경감 지원

- (중진공) ‘26년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노력하고, ‘2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\* 공급규모(※0.36조원) 대폭 확대 추진

\* (대출한도) 연간 5억원(※10억원) 이내 (용도) 운전자금 (지원기간) 3년 (이차보전을) 중점지원분야 3%p, 그 외 업종 2%p

- (소진공) 금리 7% 이상 금융권 대출을 4.5%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 확대(‘25.6.30 → ‘25.12.31 이전 승인 대출)

■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추진(‘26.下)

- (수은) 신용평가 간소화, 기술평가 등 통해 우량 중소기업 수준 금리 제공하는 신속특례대출(500억원), 기술특례대출(1,000억원) 출시(‘26.9월)

■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출시 신·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(연 최대 1.5%)해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



- (산은)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\*  
한도 확대(<sup>'26년</sup>1조원 → <sup>'27년</sup>1.5조원)
- \* 최초 승인 후 6개월마다 금리 적용방식 전환 선택권 부여(전환횟수 제한 無, 수수료無)
- (기보) 경영애로를 겪는 보증 수혜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추가 보증(기업경영개선보증) 지원 시 보증료 감면( $\Delta 0.2\%$ p) 신설(<sup>'26.9월</sup>)
- (신보)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(1.5조원)\* 지원기간 연장  
(<sup>~'26.6월</sup>→<sup>'26년 말</sup>)
- \* (대상) 경영애로 소상공인 (한도) <sup>운전</sup>5억원 <sup>시설</sup>소요자금內 (보증비율) 90% (보증료율)  $\Delta 0.5\%$ p 우대
- (지역신보) 새마을금고-지역신용보증재단 협업 통해 신용취약·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(1,700억원) 공급(<sup>'26.下</sup>)
- \* 구체적 특례 내용은 새마을금고-지역신용보증재단 논의중

### 3 서민금융 지원 강화

#### ① 중·저신용자를 위한 공공·민간의 서민금융 상품 확대

-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(일반보증·특례보증) 연간 공급 규모를 3,000억원 확대(<sup>'26년</sup>5.9조원 → <sup>'27년</sup>6.2조원)
- 중저신용자 신용 빌드업과 복지 연계 강화\*를 위한 소액, 저리(4.5%), 장기(10년) 대출 출시(<sup>'27년</sup>, 서금원)
- \* 소액(月 1만원) 성실상환 이력 형성해 제도권 금융 연계, 연체정보로 위기징후 탐지→복지 연계
-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 확대(500→1,000만원內) 및 이용대상 범위 확대\*를 통한 중저신용 청년층 자금수요 충족
- \* (기준)①개인신용평점 하위20% 이하, ②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(추가)④개인신용평점 하위50%이하 & 연소득 3,500만원 이하



- 금융회사·기업 등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 유도·지원
  -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 공급하도록 중금리 대출 제도를 개선\*하고,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 부여
    - \* (사잇돌) 성장성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상품 출시(10월), 여전업권으로 취급기관 확대(10월) 등 (민간중금리) 금리요건 산정방식 개편(6월), 건전성·영업행위 규제 인센티브 확대(4Q) 등
  - 기업·은행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활성화\* 추진 지원 및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도입 추진
    - \* (삼성)미소금융 2,000억원 추가 출연 (NH)미소금융재단 설립 (우리)신용대출 금리 7% 상한제 (KB)대부업권 등 대출 대환 (신한)고금리 대출 보유 고객 금리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 (하나) 햇살론 이자 캐시백

## ② 고정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 금리 변동성 대응 지원

- 무주택 청년 대상 '월세로 집 사는' 정책모기지\* 신규 출시 등 보급자리론(순수고정금리) 공급 확대 검토\*\* ('27년)
  - \* (대상)非APT(4억 ↓), (인센티브) 저금리, LTV 우대(80%), 생애최초 혜택 유지
  - \*\* MBS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급 목표 검토
-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(10년 이상)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규 출시 유도\*(은행권 협의, '26.下(잠정))
  - \* 은행별 자체적인 취급 여력 내에서 상품성 있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

## ③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서민·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

-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('26.12월)
  - \* (예) 대안신용평가 활성화, 연체이력 활용기간 단축, 신용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등
- 신정원·나이스평가정보 공동 개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(SCB) 도입\*
  - \* 16개 은행(기업·신한·국민·우리·농협·하나·제주('26.8월), 케이·카카오·토스·수협·iM·부산·경남·광주·전북('26.下)), 및 지역신보('27년) 등 시범운영 참여
- 비금융정보(매출·업종·상권 등)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성·잠재력 평가 → 상위등급 해당시 신용등급 상향, 금리·한도 등 우대

## IV. 향후 계획

| 정 책 과 제 | 추진 시기 | 소관 기관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
|---------|-------|-------|

### 1. 채무조정 활성화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▶ 유동화회사·대부업체 보유 장기연체채권 매입         | '26.下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장기 연체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 | '27년    | 중기부<br>금융위 |
| ▶ 금융공공기관 보유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소각    | '26.下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                   | '26.下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캠프 DIP 금융 이차보전 지원 협약 지방정부 확대    | 지속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신복위 개인 회생·파산 지원 확대              | '26.12월 | 금융위        |
| ▶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및 정책자금 우대 제공        | '27년    | 중기부        |

### 2.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확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▶ 수은 구조조정 기업 중 성실상환기업 이차감면 제도 신설     | '26.9월 | 재경부        |
| ▶ 신보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확대        | '26.9월 | 금융위        |
| ▶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시 성실상환정보 활용 추진      | '27년   | 중기부        |
| ▶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                 | '27년   | 한은         |
| ▶ 수은·산은 온렌딩 공급 확대                    | '26.下  | 재경부<br>금융위 |
| ▶ 중진공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 추진           | '27년   | 중기부        |
| ▶ 소진공 대환대출 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| '26.下  | 중기부        |
| ▶ 소진공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정책자금 구조개편 추진       | '26.下  | 중기부        |
| ▶ 수은 중기 신속특례대출, 기술특례대출 출시            | '26.9월 | 재경부        |
| ▶ 신·기보의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해 보증부담 경감하는 방안 추진 | '26.3Q | 재경부        |
| ▶ 산은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 확대(1.0→1.5조원)    | '27년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기보 기업경영개선보증 지원 시 보증료 감면 신설         | '26.9월 | 중기부        |
| ▶ 지역신보 신용취약·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     | '26.下  | 중기부        |

### 3. 서민금융 지원 강화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▶ 햇살론 일반보증·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 확대(5.9→6.2조원) | '27년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소액·저리·장기 대출 출시                      | '27년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 및 이용대상 범위 확대        | '27년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및 총량관리상 인센티브 부여         | '26.下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청년 대상 '월세로 집 사는' 정책모기지 신규 출시        | '27년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신규출시 유도             | '26.下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| '26.12월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|
| ▶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시범 도입                | 은행권·<br>지신보' 26.8월<br>'27년 | 금융위<br>중기부 |